

민주 “尹 독재왕국 만들려 해… 반드시 파면”

아권 인사 사살 · 3선 개헌 등 적힌 ‘노상원 수첩’ 내용 관련

“중대한 결심” 윤 하야설 제기에 “사퇴 권한 없다”

이재명 대표, 국힘 겨냥 “보수정당 아닌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아권 인사 사살 및 3선 개헌 등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독재로 가는 설계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된 것을 두고서는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3선 개헌에 후계자를 지정하면 그 후계자가 누구겠나.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할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

A등급에는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라고 있다

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냐”라며 “극우 정당도 아니다. 범죄 정당”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은 그야말로 테스노트”라며 “이 수첩은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길의 설계도”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윤석열은 어렵게 민주주의를 한번에 말아 먹으려고 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두고 “내란 이후에 장기집권을 꿈꾼 계획도 있다”며 “독재자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났는데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내란 수괴 주장을 누가 믿겠나. 윤석열은 하루 빨리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첩에서 후계자 지명 이야기가 나온다. 이 후계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자료를 보고 있다.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도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현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 선고 전에 하야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헌법

재판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 측이 현재 압박에 나섰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일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험,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며 “민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꿈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현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신사퇴라는 꿈수

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신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꿈을 부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명지 의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지난 14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방법 및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명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 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가 지난 14일 전주시청 내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원콜센터는 천년전주 콜센터에 전화연결시 1차 응대를 맡고 있다. 지난 해에만 15만5,236건의 통화를 통해 시민의 각종 문의와 민원 해결에 힘쓰고 있다. /김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尹 내란 마지막 퍼즐, 김건희 수사”

이성운 의원 포함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대검 항의 방문

이성운 의원(전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성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3일 윤석열 8차 탄핵 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가정사’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태웅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로부터 2통의 문자를 받았고 계엄 당일 문자에 대하여 회신했다”고 증언했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당일 이 상민에게, ‘(계엄선포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내란 과정 곳곳에서 ‘김건희’ 이름 석 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야말로 왜 내란이 일어났는지 밝힐 ‘마지막 퍼즐’인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김건희를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현재 8회차에 이르고 앞으로 10회차까지 예정돼 있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이후 현재까지 2개월이 훨씬 더 경과해 연말에 도입이 취소 되는 등으로 지역 식당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회복에 직격탄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 향의 방문에는 이성운 의원과 서영교·박군택·송재봉·이연희·김기표·김용만 의원이 동행했다. /이만호 기자

“제2회 전북RISE위원회 · 2025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 개최”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 브리핑 통해 이번주 도정 현황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청 김철태 대변인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도정 현황을 기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는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제2회 전북 RISE 위원회’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며, 김관영 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전북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 RISE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도지사, 도 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지역 대학 총장 중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RISE 정책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대학과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북 RISE 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첫 회의를 열어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25년부터 연간 약 1,0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김 대변인은 19일 오전 6시 30분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1회 전북 CEO 지식 향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관계기관 관계자 400여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이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미영 서울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도내 기업경영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명미 참석할 예정이며, 전미영 서울대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입법고문 신규 위촉… 전문성 강화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입법고문의 신규위촉을 통해 의회 전문성 강화와 단단한 법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월 입법 고문에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를 신규 위촉하며 그간의 연륜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 관련 의정활동 조력을 당부했다.

남원시의회는 2016년부터 입법·법률고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남원시의회가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 △남원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의회 농복환위, 환경산림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된 전북자치도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완주 비봉 등 악취 실태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전주 혁신도시 악취저감사업 추진과 관련 돈사 땀만이 아닌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액비

등 사업장별 계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왕궁 지역 지정과 관련된 전북자치도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완주 비봉 등 악취 실태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전주 혁신도시 악취저감사업 추진과 관련 돈사 땀만이 아닌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액비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용담댐 수상태 양광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의견수렴을 조건으로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제시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루쌀 산업 발전 방향 제안(황배연 의원), △북지시각자대를 위한 정책 제안(문순자 의원) 총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임시회 기간에 심의한 조례안 및 각종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어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을 난방 면세유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과 전수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